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간호사신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제2026호 (1976년 12월 31일 창간) nursenews.co.kr 2019년 9월 19일(매주 목요일 발행)

## 올해 전문간호사 11개 분야 322명 배출

2019년 제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322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제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9월 6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www.kabone.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통보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최종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32명 △감염관리=36명 △노인=73명 △산업=6명 △아동=10명 △응급=13명 △임상=22명 △정신=12명 △종양=60명 △중환자=31명 △호스피스=27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했다.

1차 시험은 7월 14일 치러졌으며, 368명이 응시해 311명(84.5%)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25일 치러졌으며, 325명이 응시해 322명(99.1%)이 합격했다. 2차 시험 응시자에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올해 2차 시험에 재응시한 인원이 포함됐다.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

올해 합격자 32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7554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1179명 △감염관리=403명 △노인=2361명 △마취=70명 △보건=4명 △산업=160명 △아동=109명 △응급=315명 △임상=302명 △정신=416명 △종양=930명 △중환자=723명 △호스피스=582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 5718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지정기준과 수가 보상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 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 비율은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외래 비율은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춘다. 입원 8.4%, 외래 4.5%까지 유지 시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둘째, 진료 의뢰의 원칙을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한다.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나간다.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미디어리뷰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

### 조선일보 오피니언 발언대에 실려

국민들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간지 오피니언 지면에 실렸다.

김종호 호서대 교수(법학박사)의 기고문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 시급'이 조선일보 9월 11일자 오피니언 지면(A29면) '발언대'에 게재됐다.

김종호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나날이 다양화·전문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간호서비스가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보조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중복과 역할 혼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간호 관련 단독법에 간호인력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또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부여해 간호인력 간 업무 중복 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현재 수십 개의 개별 법령에 간호 관련 내용이 무분별하게 들어 있어서 법령 간 충돌하고 위계질서도 맞지 않는 등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분리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40만 간호사들의 염원이자 국민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며 기고문을 끝맺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본격 추진

### 선도사업 신규 참여 지자체 8곳 … 총 16곳으로 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기존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9월부터 2차 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8곳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이다. 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이다.

이에 앞서 1차 선도사업은 지난 6월부터 지자체 8곳에서 시작됐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보건·복지·돌봄·주거 관련 각종 필수 연계사업은 선도사업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여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 등을 반영해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추진한다.

주혜진 기자 hjjoo@

KAKAO TALK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대한간호협회

플러스친구 등록방법

카카오톡 ▶ 상단 검색창 '대한간호협회' 입력 ▶ '친구추가' 클릭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 '간호대상' 수상 후보 추천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대상 수상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 분**
- 간호대상

**지원자격**
- 간호사로서 평생을 간호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 이력서 1부(개별양식 사용, 사진은 파일 송부)
- 기타 공적사실 입증자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
-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
- 개인 및 단체 : 대한간호협회 중앙회를 통해 접수 (szlee@koreanurse.or.kr)

**지원마감**
- 2019년 9월 30일(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발 표**
- 2019년 10월말 예정 (개별 공지)

**시 상**
- 정책선포식에서 시상 (해당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임)

**문 의 처**
-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국 02)2260-2541